50년 만에 '총수부재'… 롯데그룹 미래사업 '올스톱'

공정위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담합 유한킴벌리 과징금 6억500만원

유한킴벌리가 정부의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135억원)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또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실제로 담합한 입찰 41건 중 26건이 낙찰됐으며,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한편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들이 지속해서 담합해 온 사건을 제재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웅 기자

"경제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롯데 "일자리·M&A 위축 우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 창립 50년만에 총수 부재라는 초유의 위기를 맞이한 롯데그룹은 신 회장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 등 '뉴롯데'가 '최순실 게이트'에 발목이 잡혔다. 그동안 신 회장은 '롯데=일본기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영 효율화와 경영권 완정화를 위해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뚝심 있게 추진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순실씨 1심을 선고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의 선고 공판도 함께 열었다. 신 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가 면세점 특허 탈락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제공했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11월 면세점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고, 대가를 기대하고 출연한 것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하지만 신 회장의 법정 구속으로 인해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유지 여부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등기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활동도 위축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은 현재 중국 롯데마트 매각과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오너가 부재인 상황에서는 기업의 M&A나 해외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또한 신시장 개척 작업도 경고등이 켜졌다. 현재 롯데그룹은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 규모만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40억달러(약 4조3000억원) 규모의 나프타 분해 설비 증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 호찌민 '에코 스마트 시티' 사업 등에는 20억달러(약 2조1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인도와 미얀마 식품 부문 M&A에 2억5000만달러(약 27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5억달러(약 3조8000억원) 규모의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크레커 플랜트 건설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롯데 지주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신동빈 회장이)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한스키협회장은 맡고 있다. 당장 차질이 있을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 회장의 법정구속은 경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롯데는 사드보복 등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근 5년 간 고용을 30% 이상 늘린 '일자리 모범기업'인데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판결이 롯데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배 전무는 "향후 법원이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경제계 역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metroseoul.co.kr

›› 1면 'GM 군산공장 폐쇄 쇼크…'서 계속

대규모 제품 투자로 일자리 유지 가능

제시된 안에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직접 제품 투자가 포함됐고,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한국지엠의 설명이다.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한국지엠과 주요 이해관계자는 한국 내 사업 성과 개선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GM은 글로벌 신차 배정을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있으므로, 한국지엠 경영 정상화와 관련해 GM이 다음 단계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2월 말까지,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에 따라 GM은 약 4억7500만달러의 비현금 자산상각과 3억7500만달러 규모의 인건비 관련 현금 지출을 포함, 최대 8억5000만달러의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한국지엠은 설명했다. 지출은 대부분 2018년 2분기 말까지 '특별지출'로 회계장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한줄 News

정책·사회

▲ 올해 초·중·고교 일부 학년의 **검정교과서 가격**이 기존보다 권당 최대 30%까지 내린다. 새 교과서가 학습량 감소에 따라 평균 쪽수가 감소했고, 교과서 가격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적정 가격 분석을 통해 출판사와 협상한 결과다.

산업

▲ **도미니크 시뇨라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이 취임 후 첫 공식행사에서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마켓

▲ 은행들이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를 앞두고 수신 고객 유치에 나섰다. 향후 기업대출 확대로 예대율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면 예수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하기 때문. 이에 은행들은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고 특판을 실시해 예금자를 끌어모으고 있다.

유통&라이프

▲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철수한다. 주류·담배 사업은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스노보드 금메달을 차지한 **클로이 김**(Chloe Kim)이 북미 지역 라네즈 모델로도 인기를 얻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군산시 "공장 문 닫은 GM, 불매운동으로 대응"

최소 4만명 이상 GM과 연관

'사전대처 못했다' 정부 비판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연합뉴스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전북 군산시는 13일 "근로자들과 30만 군산 시민에게 절망감을 안겨준 만행"이라며 불매운동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군산 시민은 그동안 지엠 차 구매운동을 열고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인) 뉴크루즈의 홍보에 앞장서는 등 한국지엠에 열정을 보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군산시는 "지엠 군산공장은 1만3000여명의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지엠은 군산공장 직원고용 승계를 전제로 한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이어 지엠 군산공장까지 폐쇄된 것은 현 정부가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탓"이라며 "정부의 한국지엠에 대한 유상증자 등 자금 지원은 군산공장 가동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위기에 걱정이 크다.

당장 차량 생산 중단으로 일감을 얻지 못한 협력업체 폐업이 시작되면대규모 실직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한국GM 군산공장에 부품 등을 납품하는 1·2차 중소 협력업체는 135개로 추산된다. 근로자는 1만700여명으로 군산시 전체 고용비중의 약 22%를 차지한다.

근로자에다 가족 등을 합하면 최소 4만명 이상이 한국GM 협력업체와 연관돼 있다는 게 군산시 설명이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차량 26만대를 생산한 2013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했다.

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했던 지난해는 3만대 수준까지 급감했다.

같은 기간 5조원을 상회했던 생산액은 1조원대로 쪼그라들었고 공장 직원도 절반으로 줄어 현재 2천4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GM 계획대로 오는 5월부터 군산공장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면, 고용승계가 담보되지 않는 이상 공장 직원은 물론이고 협력업체 근로자도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불법추심하면 담당 직원外 채권추심회사에도 과태료

금융위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불법 추심을 하면 채권추심 회사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의 목적이 있으면 개인의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대통령령으로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또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채권추심인의 불법 추심 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한다.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도 확대한다.

현재는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 제공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면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토록 한다.

이에 따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29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